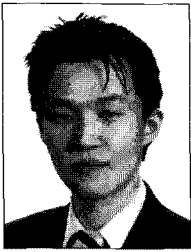


원유가격 결정시스템 본질은 낙농가 목장경영 안정이다!



배 정 식
본회 지도부장

여름 내내 뜨거운 감자였던 목장원유 가격 결정이 일단락되었다. 원유가격은 분명 목장의 생산기반유지를 위한 생존의 문제다. 그러나 현실은 수요자인 유업체와 물가안정을 화두로 내세운 정부와의 협상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예년에 볼 수 없었던 언론의 취재 열기 속에 원유 가격 결정은 전 국민적인 관심사로 떠올랐다. 집유, 납유 거부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벌어졌다. 원유가격 조정의 본질은 낙농가의 목장경영 유지에 있다. 그러나 현실은 통계청의 생산비와 정부의 물가안정을 사이에 두고 지리한 협상을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3~4년 주기로 반복되고 있는 원유가격 결정의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다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이의가 없다. 2008년도 원유가격 조정 당시에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원유가격연동제 문제가 제기되었다. 그러나 기준설정과 관련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도 원유가격연동제 실시에 유업체, 생산자, 정부 모두 동의한 상태다. 이런 식의 원유가격 결정구조를 계속 끌고 갈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으로 2개월 이내에 원유가격연동제 조정원칙을 수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낙농진흥회 출범 이전 원유가격은 정부고시가격이었다. 낙농진흥회가 출범하면서 원유가격은 생산비가 $\pm 5\%$ 이상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당시 경제상황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2004, 2008, 2011년 현재까지 3차례의 원유가격 조정을 위한 협상이 있었지만 한 번도 순탄하게 원유가격이 조정된 적이 없다. 이유는 통계청(이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의 생산비에 대해 낙농가들이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신뢰할



수 없는 생산비를 기준으로 한 원유가격 조정은 애시 당초 화약고나 다름없는 문제였다.

생산비조사에 대한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누누이 지적되어왔다. 다른 품목과 달리 우유생산비는 원유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만큼 잘못된 조사는 과장이 클 수밖에 없다. 예전에도 우유생산비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지만, 행정 비밀주의 원칙을 이

유를 기각된 바 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보공개를 안 하고 그냥 넘어간다고 해서 생산비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진 않는다. 오히려 불신의 골이 더 깊어지게 마련이다. 2010년도 통계청의 생산비만 보더라도 생산비는 증가했지만 젓소 두당 수익성은 좋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협회에서는 우유생산비조사와 관련한 연구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역시 여기에서도 착유우에 대한 감각상각비 산정과 자가노력비 산정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에 대한 올바른 개선만 이뤄지더라도 현재보다 ㄹ당 100원 남짓 생산비가 상승하게 된다. 또한, 쿼터 구매비용, 가축공제료 및 보험료, 생산관리 및 자동차비들에 대한 미적용 문제로 생산비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게다가 기장누락과 두당 산유량을 산출하기 위한 조사에 대해 여전히 신뢰할 수 없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있다.

우유생산비 조사에 대해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번에 협회에서는 긴급 낙농경영 실태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유대수입에서 차지하는 사료비에 대한 비중을 조사한 결과 현재 시점에서 78%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어 목장 경영의 악화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원유가격 논의과정에서 통계청 생산비를 기초로 한 기준생산비, 비교생산비에 대한 설전을 벌이는 현실이 매우 안타까울 수밖에 없었다. 문제는 목장경영안정을 위한 원유가격 현실화였지만 논의과정은 수치의 함몰이었다.

지난 8월초 국회 상임위에서도 원유가격 결정과 관련한 사안들이 도마 위에 올랐다. 이구동성으로 모두가 납득할만한 원유가격결정시스템 구축을 주문하였다. 통계청 조사결과에 대해서도 현실과 괴리가 있어 과연 이를 바탕으로 한 원유가격 논의가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과 생산비를 산출한 자료가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낙농가의 권익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모순에 대해서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더불어 FTA체결에 따른 낙농산업 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해 조속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목장의 우유생산은 경영이다. 경영은 수지타산이 맞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목장을 접을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낙농산업기반 붕괴가 가속화되는 마당에 낙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한 방안마련은 필수다. 그런 점에서 향후 논의될 원유가격연동제는 바로 낙농가의 목장경영안정에 바탕을 둔 실질적인 연동제가 수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 불씨는 남아 또 다시 극한 상황으로 치닫게 될 것이고, 이는 낙농산업과 유가공산업 발전에도 커다란 장



애요인으로 남게 될 것이다.

그러나, 원유가격 결정시스템과 관련하여 보다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와 같이 낙농제도 개혁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히 원유가격연동제를 실시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느냐의 원초적인 의문이다. 낙농제도 개혁을 통해 유업체와 생산자간 대등한 거래교섭력이 확보된다면 지금과 같은 극한의 상황까지 내몰리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점이다. 사실상 급변 원유가격 협상결과는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이전 정부고시가격으로의 환원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낙농제도 개혁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현재 논의기로 한 원유가격연동제는 농가의 수취가격을 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향후 원유가격연동제는 생산비에 더해 적정이윤을 포함한 논의가 되어야 마땅하다. 또한 유업체의 제조, 판매경비와 유통업체의 유통마진에 대한 명확한 자료와 정보가 공개되어야 한다. 이 같은 전제조건이 수반되어야 실질적인 연동제 논의가 가능하다. 낙농가의 목장원유가격 인상이 제품가격 상승의 전부인 양 받아들여지는 현실은 분명히 바뀌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목전에 닥친 FTA 파고는 피할 수 없는 문제다. 올 초 정부는 원유수급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손쉬운 무관세물량 확대에 맞섰다. 낙농은 소위 잉여를 안고 가야하는 산업이다. 우리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신선우유를 공급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낙농가의 경영안정에 있다. 어떠한 대책이든지 간에 생산자 없는, 생산자를 등한시 한 대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낙농산업발전을 위한 종합대책 마련의 틀 속에서 원유가격연동제 논의가 병행되어야 되풀이 되는 악순환을 막을 수 있다고 본다.

낙농가의 희생을 담보한 낙농산업 발전은 어차피 한계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문제는 목장의 경영안정이고 이는 낙농가의 우유재생산을 가능케 하는 방안마련이 필수다. ☺